

데스크 시각



채희중 편집부국장·사회부장

언제부터인가 야구장이나 축구장, 심지어 영화관에 스카이박스(skybox)라는 VIP좌석이 생겨났다. 기아챔피언드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 뭔가 알 수 없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높은 위치의 독립된 공간. 소파와 탁자에 냉장고·TV·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어 마치 스카이 라운지에서 경기를 내려다보는 느낌이랄까. 특히 소나기가 내리자 우양좌향하는 아래쪽 일반석과 달리 스카이박스에서 보는 야구장 풍경은 운치마저 느껴졌다. 스카이박스 요금은 1인당 6만 원으로 일반석의 5배 가량, 비싼 요금이지만 돈값을 한다는 생각에 아깝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부담되는 가격을 지불하되 약간의 호사(?)를 누리며 느끼는 만족감 때문에 스카이박스를 이용한다. 스카이박스 이용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상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많은 기회를 포기해야 가능한 사치이다.

야구장 좌석 얘기를 취미나 스포츠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풀어낸 이가 있다.

10%만을 위한 스카이박스, 고려고

전 세계에 '정의론'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는 2012년 출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야구장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함께 관람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섞였으며, 비가 오면 함께 젖었다. 하지만 부자가 앉는 스카이박스가 생기면서 함께 어울리던 공간이 없어졌다. 서로 부대끼며 소통하는 공간과 경험이 사라진 것은 스카이박스에 앉아 내려다보는 사람이나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꼽는다. 이런 현상을 샌델 교수는 '스카이박스화(skyboxfication)'라고 부른다. 개인이 소유한 돈과 권력, 학벌에 따라 박스가 정해지고 그 박스에 앉으면 다른 박스와는 구분돼 마주치지도 않게 되는 극단적인 단절을 이른다.

'1등급'이면 오답도 정답 처리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의 복지 정책과 사회 정의는 돈·권력·학벌 격차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보편적 믿음과 바람이 영원히 꿈에 그칠지 모른다는 회의감이 들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즉 SKY대학 입학률이 높아 광주지역 명문고로 꼽혔던 고령고가 수년간 시험 채점 및 점수 조작을 통해 '상위권 내신 몰아주기' 일

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애초 1학기 시험 문제 유출로 불거진 고령고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이게 정말 학교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 학교는 성적 상위 10%의 학생을 SKY에 보내기 위한 기숙형 학원이었고, 나머지 90%는 상위권 내신 성적을 위한 들러리였을 뿐이었다.

고3의 경우 문과 10명·이과 30명으로 구성된 심화반 학생들의 점수는 교사들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오답을 써도 정답 처리됐고, 빈칸으로 제출해도 5점을 줬으며, 동일한 답에는 일반 학생은 3점이지만 심화반 학생에게 7점을 줬다. 더불어 시험 때면 심화반 학생들에게 최고난도 문제를 알려 줬다.

이번 감사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고령고가 지난 3년간 성적을 조작한 것은 수천 건에 이른다.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 분석할 수도 없다. 성적 관련 모든 사안을 분석한다면 이젠 학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답과 빈 답에 점수를 주고, 몰래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비리가 아니다. 정당하게 시험을 치른 90% 학생의 점수와 내신을 빼앗은 범죄이다. 이 같은 행태가 장기간 지속되려면 학교와 교사, 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모를 하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학교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SKY 입학 을 목표로 삼는 것까지야 자유이다. 하지만 SKY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1등급 제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올려 준 교사, 부정행위 해택으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 이 같은 성적 조작의 고리를 전 학교와 학교법인,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성적 조작은 엄연한 사기 행위

출발부터 반칙과 특혜를 가르치는 학교, 정당한 경쟁보다는 손쉬운 편법으로 성장한 이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상상해 본다. 이런 리더들이 이끄는 사회에 기본과 원칙이라는 구성원들의 보편적 사고가 통용될까.

고령고의 성적 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계에 파다하게 알려진 일이다. 학교 법인이라고 성적 조작 비리를 몰랐을까. 법인에게 학교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교육청의 요구가 너무나 한가롭기만 하다. 성적 조작은 학내 비리가 아니라 공문서나 사문서 조작이며, 대학 입학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의 성적을 떨어뜨린 사기 행위인 만큼 반드시 경·검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광주 교육에 먹칠을 한 고령고는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교육청 감사 결과에 반발해 건물에 '근조' 현수막을 내거는 등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다.

/chae@kwangju.co.kr

은폐칼럼



임명재 약사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나라는 인파조로 어려움이 많다. 도발의 원인은 일본 전방 기업들이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한 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불복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있다. 대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요구한대로 수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이전에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문제이고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아베 정권의 태도가 참으로 가소롭다.

일본은 근면함과 지구력으로 패망의 혼돈을 극복하고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것을 국제 사회는 칭송하고 있

동아시아, 유럽 연합을 꿈꿔보자

다. 깨끗하고 친절하다고 한다. 일본은 일본어로 '와' (和)라고 하는 이웃에 폐끼치지 않고 화합하며 사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이웃이나 조직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이디메'라는 파들림을 당할 정도로 이를 매우 중요시 한다. 이 같은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마도 아베의 군국주의적 태도를 경계하는 의미를 담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날기도 했다. 이렇듯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실제 그들의 행동에는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 태도가 팽배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중국이 개방화를 추진하는 이후로 극동 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 평화로운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 과학에 투자하고 전 세계의 거대

처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소재 부품에 강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산업 경쟁력으로 중간재를 생산하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낮은 임금으로 완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2017년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국내 총생산액(GDP)을 살펴보면 중국 12조 2300억 달러, 일본 4조 8700억 달러, 그리고 대한민국은 1조 53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온라인 정보업체 하우머치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GDP를 비율로 나타낸 지도를 확인해보면 중국, 일본, 대한민국 3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9%, 6.18%, 1.9%로 합계 21.98%를 차지하는 반면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모두 합치면 18.22%를 기록하고 미국은 23.32%를 나타낸다. 북동아시아 3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3등분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를 경쟁적으로 식민지화했던 유럽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유럽이 유럽 연

합으로 단일화하고 화폐를 유로화로 통합하기까지 독일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약속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이웃하는 국가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3국도 유럽처럼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침략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해 배상하는 등 주변 국가가 믿을 수 있게 지속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일본이 전형적인 자제를 갖추게 된다면, 동서독이 통일되었던 것처럼 남북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고 북한에서 남한의 기업과 세계의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북동아시아가 유럽처럼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일본이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일본 국민을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더불어 일본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길 바란다.

기고



황동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

바다는 지구 생명체의 90%가 산다고 할 만큼 수많은 생물 자원과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해수양장, 갯벌, 해안 경관, 해양 치유 자원 등이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어획량은 1986년 173만 톤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101만 톤으로 떨어졌다. 특히 명태, 고등어, 참조기 등 우리가 즐겨찾는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사라져가고, 잡히는 물고기의 크기도 작아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 30만 명을 넘었던 어업 인구는 30년이 지나지 않은 2018년에는 12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산 자원의 감소 이유를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 어업 등이 가장 큰

블루 이코노미로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자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린 물고기의 남획은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잡힌 어린 물고기의 불법 유통은 수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은 참조기나 갈치 새끼의 남획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산 자원 중 31%가 남획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로 말미암아 수산 자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원 감소는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른바 해양 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청색 경제인 블루 이코노미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전남도에서는 2009년부터 해조류와 물고기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대규모 바다 숲과 연안 바다 목장을 조성하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 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생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2018년까지 전남 연안 17개소에 177

억 원을 투입하여 1950ha의 바다 숲을 조성하고, 7개소에 300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 바다 목장을 조성 중이다. 또한 물고기 등 어패류의 안정적인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 어초를 투하하여 23만ha의 인공 어초 어장을 조성하고, 인공 어초에 걸린 어구 등 폐기물 수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자율적 휴어제는 기존 정책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어 수산 선진국에서 수산 자원 회복 수단으로 효과적 입증된 제도라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하여 바다의 수산 자원을 지키고, 가꾸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우리 후손들의 재산인 풍요로운 바다의 수산 자원을 우리가 함부로, 무한정 빌려쓰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참여와 실천은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족 자원이 풍부한 건 강한 바다를 만들어 현재와 미래의 어업인들은 부자가 되고, 미래의 후손들은 풍요로운 일터를 제공받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전남도 어업인들이 앞장서서 블루 이코노미를 완성하여 블루 오션을 만들어 가자.

社說

광주·전남 미래 광역교통망 국가 계획 반영을

대도시인 광주권역과 인근 전남 시군 간의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교통망을 대체할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광주와 전남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광주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마련해 정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여기에 포함된 광역 도로는 광주 하남-장성 삼계(15.4km), 광주 대촌-나주 금천(9.1km), 광주 삼도-함평 나산(5.4km) 간 등 광주와 장성·함평·나주·담양을 연결하는 여섯 개 구간이다. 또 광주-나주 간(21km)과 광주-화순 간 철도(12.4km) 등 두 건의 광역 철도 구축 사업도 담겼다. 시도는 광주-고흥(96km) 간 고속도로와 광주 3순환 고속도로(나주 금천-담양 대덕 간 97.5km) 건설 사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26개 노선, 247대의 시내·농어촌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도 건의했다. 이 같은 교통망 구상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7조 9125억 원으로 추정된다. 광주와 전남 인접 지역을 잇는 광역교통망은 산업단지화 혁신도시 조성으로 기존 도로 기능이 한계에 달했고 선형 불량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대체 교통망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전기는 막대한 예산 확보. 재원은 도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철도는 7대 3으로 분담하게 된다. 특히 국비를 원활하게 확보하려면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광주·전남의 신규 광역교통망을 국가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한빛원전 땀질 처방으로는 안전 확보 어렵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 한빛 원전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땀질 식 처방'만을 거듭한다면 차라리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된 한빛원전 1·3·4호기의 완전 폐쇄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지역민들의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각인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상회의측은 원전 폐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서명 운동과 캠페인 등 비롯한 국회 토론회 개최, 9월 말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연계한 문제 제기 등 다양한 행동 단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땀질 식 처방'만을 거듭한다면 차라리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된 한빛원전 1·3·4호기의 완전 폐쇄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지역민들의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각인지 알 수 있다.

비상회의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국민의 안전 보다는 가동을 우선시하는 한 국수력원자력의 단일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도 부실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탈핵단체들은 지난해 7월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이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의 재가동만 서두를 게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속히 마련해 지역민들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어요. 민초들이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으니까. 임진년에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을미년에 의병이 됐죠. 을미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제 강점기 직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조선 침략을 준비하던 일본군의 모리 다카시 대좌의 대사다. 이 장면에서 다카시 대좌는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해 우리 민족성까지 연구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을 밟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

경제 회복으로 인해 한·일 경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어서인지 국민들의 극일(仇日)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느 때보다 비장하다. 일제 강점기 의병과 독립군의 신본은 시능공상으로 다양했다.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선 국민들의 신본도 다양하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름 없는 의병들이 다시 한번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으면 좋겠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의병(義兵)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